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3. 5. 19(금) 10:30, 정부서울청사 -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폭우·폭염이 예상되는 여름철 재난대책과 함께, 이번 주 양일간에 걸친 건설노조의 집회와 관련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집회는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습니다. 17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기고,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 차례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으며, 심지어 이미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등 막대한 시민불편을 야기하였습니다.

정부는 어제 경찰청에서 발표하였듯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원칙하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토양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되던 권위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입니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에 맞게 격조 있고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